



의안번호	제 2022 - 7호
보 고 연 월 일	2022. 3. 28. (제11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45차 전체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등 검토	2
1. 유형분류	2
2. 권고 형량범위	3
3. 양형인자	4
4. 집행유예 기준	14
5. 자구 수정	15
III.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	24
1. 기본 원칙	24
2. 형종 선택 기준	25
3. 권고 형량범위	26
4. 집행유예 기준	26
5. 적용범위	27
IV. 기타	28
1. 보고 배경	28
2. 일정변경안	28
V. 향후 일정	30

【별첨】

이재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최재아, “아동학대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의견 검토”

최형준, “벌금형 양형기준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김한울,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관련의견 검토”



I. 제145차 전체회의

1. 일시 · 방식

- 일시 : 2022. 3. 14.(월) 16:00 ~ 18:0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3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한울, 김형찬,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아동학대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등 검토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II.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등 검토

1. 유형분류

가. 의견 요지: 장기적으로 독립된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필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종래 양형관행이 개별 범죄군의 판단방식에 따라 더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아동학대범죄군을 신설하여 아동 대상 범죄행위의 특수성을 기민하게 반영하는 양형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그 기본범죄들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산재해 있고, 그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법정형 등이 상이한바, 이를 모두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
- 아동학대범죄가 포함된 현행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대상의 추가,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이번 수정안에서 ‘아동학대’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및 수정하고(대부분의 아동학대범죄는 이에 포섭될 것으로 예상함), 그 외 형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것으로 기대함
- 별도 범죄군 분류의 논거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나, 현행과 같이 분류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반영에 큰 문제가 없음

2. 권고 형량범위

가. 의견 요지: 전반적 상향, 아동학대치사 관련 엄중한 처벌 가능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규범적 조정을 하여 전반적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됨.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살인의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가 보완됨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중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외에는 모두(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기본영역이나 가중영역의 형량을 상향하였음
- 이번 수정안에서 설정대상으로 추가한 아동학대범죄(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매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의 경우, 양형실무 및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적 조정을 통해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였음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구성요건의 개념 범위 및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바, 이번 수정안에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거나 비교적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는 가중영역 해당사건에서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차회 수정 시 점진적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었음

3.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1)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대유형 3(아동학대)의 양형인자는 아니고, 대유형 1, 2(체포·감금, 유기·학대)의 양형인자임**

(가) 의견 요지: ‘손해액 상당’ 정도가 적절함

- ① 합의에 준할 정도의 기준을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 으로 정하고 있는데, 많은 형사합의에서 상대방의 범죄에 대한 용서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②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2/3만 배상하여도 감경사유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합의에 준할 정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음

(나) 논의 결과 ➡ **의견 불일치**

양형기준안(다수의견)	수정안(소수의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수의견(10인) : **양형기준안 유지**

- ‘손해액의 2/3 이상’ 기준은 횡령, 배임, 사기범죄 등 전형적인 재산범죄에서 오랜 기간 특별감경인자 등으로 설정, 적용되어 왔고, 양형실무에도 이미 안착한 상태인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라는 기준은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두었으므로, 문언상 오

해의 소지가 크지 않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 등 위 양형인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개별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법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함

㉡ 소수의견(3인)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 부분 삭제 의견

- 제11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방안’ 의결시,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의 규정에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
-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양형요소’로서 위 규정이 채택되었으나,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범죄군(살인, 성범죄, 체포·감금 등)에서는 위 표현을 삭제함이 국민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양형기준을 일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처벌불원

(가) 의견 요지: 삭제, 엄격 판단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① 아동학대범죄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바, 피해아동에게 부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 자체가 아동의 인권에 반할 수 있음. 행위자 아닌 보호자나 친인척 등이 처벌불원 의사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삭제 필요
-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 이후 피해아동을 중용하여 범죄사실의 은폐나 축소를 시도하거나 불처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위력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항 라목(협박죄)을 설정범위에 포함시켜 가중요인으로 고려 필요. 처벌불원은 만성적인 피해자화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음. 처벌불원에 대한 엄격한 판단 필요
- ③ 처벌불원인자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여야 함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부모나 친족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성이나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주된 수혜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그러나 ① 2018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유지되었고, 이번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도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 따라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하기로 의결한 점, ②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아동학대범죄에서 유독 그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불원의사 인정요건의 강화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도 엄격한 양형조사, 심리를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고,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호자 등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중용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여 가중인자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피해자 사망 또는 연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확인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하여는 차회 수정 시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었음

나. 특별가중인자

- (1) 의견 요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 ‘보복, 원한, 증오감’의

대상 확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복, 원한, 증오감'의 대상은 피해아동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나 피해자의 주변인인 경우도 있으므로 그 대상을 넓혀야 함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보복 등의 대상이 피해아동 자체보다는 그 부모 또는 상대 배우자 등인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양형인자의 정의규정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포섭될 것으로 보임

다. 일반감경인자

(1) 범행 후 구호 후송

(가) 의견 요지: 표현 수정

후송행위 자체의 기반이 되는 구조행위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현행 살인범죄, 성범죄 등 양형기준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위 양형인자의 경우 구호와 후송이 분리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구호나 후송 등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형식적인 구호 내지 후송이었는지 등 위 양형인자의 인정 여부는 재판사항임

(2) 소극 가담

(가) 의견 요지: 면밀한 판단 필요, 방조 포함 검토 필요

아동학대범죄에서 보호자가 복수인 경우, 직접 가해 행위자 외 다른 보호자는 그 반대에서 보호요인이 되는 보호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보호자, 방조 또는 방관하는 보호자 중 하나임. 피해사실을 인지한 비가해 보호자가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할 경우 피해아동에게는 직접 가해 행위자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함. 따라서 감경인자 적용 위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고, 방조 또한 공범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현행 양형기준은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대해서는 적용되나,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소극 가담은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현행 양형기준상 살인범죄, 성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소극 가담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위 양형인자는 형벌과 책임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한 것인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서 소극 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사항임

(3)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 의견 요지

아동학대범죄군 중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규정의 문구의 적정성 검토 필요

(나) 논의 결과 ⇨ 정의규정 일부 수정,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양형기준안 기재 정의 규정	수정안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p>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p> <p>- 피해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p> <p>-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 범행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p> <p>-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p>	<p>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p> <p>-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p> <p>-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p> <p>-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p>
---	---

- 부양·보호자의 우발적 범행인 경우 ‘장기간’을 추가하여 성립범위를 제한함
- 피고인이 먼저 피해아동으로부터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장기간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아동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할 수 있도록 수정함

라. 일반가중인자

(1)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가) 의견 요지: ‘미취학’ 삭제, 장애아동 상대 범행 추가

- ① 취학 여부 삭제 무방. 오히려 나이에 관계없이 아동의 장애상태(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 등)를 이용한 범행을 가중인자로 제안
- ②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인자는 대상범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취학 여부는 삭제해야 함. 아동의 장애상태를 이용한 범행을 가중인자로 추가해야 함

(나) 논의 결과 ⇨ 일부 표현 수정, 나머지는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양형기준안	수정안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나 신체적

범행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기본 범행 자체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임을 전제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가중인자로 규정한 것이고, 한편 형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가중인자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위 양형인자는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대한 정의규정(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참조한 것인데, 현재 취학연령이 6세 이상이므로 ‘6세 미만’은 ‘미취학’임이 자명하나, 동어반복이고 다수의 관계기관에서 이 부분 표현 수정을 요구하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미취학’ 표현 삭제함이 상당함
- 현행 살인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등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관련 내용(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장애 아동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위 양형인자의 내용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2) ‘6세 미만 또는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인자의 위상

(가) 의견 요지: 특별가중인자로 격상

6세 미만(적어도 의사표현·행동능력이 대단히 불완전하여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최연소층 2세 미만) 아동 상대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야 함

(나) 논의 결과

- ① 다수의견(8인) : 일반양형인자로 유지

- 2018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전형적인 사안에서의 피해 아동의 나이(대부분 6세 미만)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일반가중인자로 추가된 점,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아동, 즉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기본범행임을 전제로 비교적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한 점, 아동학대범죄 중 상당수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행이고 이에 따른 양형실무가 상당 부분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된 점, 만약 특별가중인자로 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개의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고,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형(하한 4년)만을 권고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가중인자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② 소수의견(5인) : **특별양형인자로 격상**

- 전체 아동(18세 미만) 중 특히 범행에 취약한 '6세 미만'의 경우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점, '6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동학대 전체 피해자의 22.6%이므로 특별 취급을 하더라도 과잉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적은 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2개의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필요가 오히려 높은 점,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중영역으로 취급하여 집행유예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가중인자'로 수정함이 상당함

(3) 보호자

(가) 의견 요지: 가중인자 추가

- ①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보호자와 피보호자인 아동 간의 특수한 사회적 관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경우가 행위의 주체가 보호자임을 전제로 하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행위의 주체가 보호자로 한정되지 않음. 많은 아동학대범죄가 보호자에 의한 범행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은폐될 가능성이 높음
- ② 아동학대범죄의 70~80%가 친권자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의 보호자인 친권자, 후견인 등의 범행은 가중인자로 반영하여야 함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①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범행이 기본범행임을 전제로 비교적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한 점, ②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행위의 주체가 보호자인 점, ③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경우 그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이 보호자에 의한 범행이고 이에 따른 양형실무가 상당 부분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된 점, ④ 보호자가 주체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자에 의한 범행 자체를 가중적 양형인자로 보기는 어려움

(4)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가) 의견 요지: 피해 야기 개념 확장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태양에 비해 다소 협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 야기'의 개념을 조금 확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이번 수정안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함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접근, 기다림, 전화, 물건 훼손'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¹⁾, 이번 수정안의 정의규정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포섭될 것으로 보임

(5) 만취상태 서술식 기준

(가) 의견 요지: 자의 만취상태 야기는 특별가중인자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는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이번 수정안에서, 아동학대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폭력 성행의 발현이라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 폭력범죄 등과 같이 요건이 강화된 서술식 기준을 두게 된 것임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 양형기준상 위 양형인자의 전반적인 위상 및 다른 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가중인자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4. 집행유예 기준

가. 의견 요지

-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범죄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중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동일 문구의 양형인자 수정에 맞추어 수정

나. 논의 결과 ⇨ 일부 표현 수정, 나머지는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양형기준안	수정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을 상대로 한 범행

5. 자구 수정(의견 일치)

가. 대상범죄에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범죄를 명확히 기재함

-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상습범(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고, [유형의 정의]에도 죄명 및 구성요건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표지에 반영하여야 함
- 대검 죄명 예규도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죄명을 부여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범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제71조 제1항 각호 각 죄명)]'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카목의 각 죄명)]'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구체적 범죄군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표지에 적용범위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도 있음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기존 양형기준안 표지 부분 (수정안 2쪽, 양형기준 책자 434쪽)	추가 수정안
존속유기치사·중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 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	존속유기치사·중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 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

<p>호, 제72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학대(청소년 보호법 제57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72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결강요·이용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p>	<p>호, 제72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학대(청소년 보호법 제57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72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결강요·이용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상습범(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p>
---	---

(2)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기존 양형기준안 표지 부분 (수정안 38~39쪽, 양형기준 책자 288쪽)	추가 수정안
운전자 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사· 운전자 협박치상·운전자 협박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 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운전자 폭행·운전자 협박(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 행치상·운전자 폭행치사·운전자 협 박치상·운전자 협박치사(특정범죄가 중법 제5조의10 제2항), 신고의무자 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 7조,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 의 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 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기존 양형기준안 표지 부분 (수정안 65쪽, 양형기준 책자 621쪽)	추가 수정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모욕(형법 제311조), 상관모 욕(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모욕(형법 제311조), 상관모 욕(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아 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 법 제6조, 제2조 제4호 사목),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 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사목) 에 해 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 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기존 양형기준안 표지 부분 (수정안 86쪽, 양형기준 책자 685쪽)	추가 수정안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2조 제4호 아목)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아목) 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기존 양형기준안 표지 부분 (수정안 105쪽, 양형기준 책자 365쪽)	추가 수정안
누범특수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누범특수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차목)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기존 양형기준안 표지 부분 (수정안 125쪽, 양형기준 책자 499쪽)	추가 수정안
문화재건조물파괴(문화재보호법 제 94조, 문화재건조물방화·일수는 제외, 이하 같음)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문화재건조물파괴(문화재보호법 제 94조, 문화재건조물방화·일수는 제외, 이하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2조 제4호 카목),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카목)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형의 정의를 명확히 함

-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와 같은 법 제72조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이루므로 수정

기존 양형기준안(수정안 19쪽)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72조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72조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72조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제72조
	구결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7조 제8호, 제72조
제2유형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72조
제3유형 매매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72조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추가 수정안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72조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72조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72조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제72조
	구결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제72조
제2유형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72조
제3유형 매매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72조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2) 아동복지법위반죄 상습범의 구성요건 명시

-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상습범(아동복지법 제72조)과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관계: 아동복지법 제72조만 적용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 위반의 상습범에게는 아동복지법 제72조만 적용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제2조 제4항 타목)는 적용되지 않음
- 이에 기존 양형기준안도 12쪽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부분을 삭제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기존 양형기준안(수정안 20쪽, 양형기준책자 119쪽)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추가 수정안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호의 죄(제17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다. 명백한 오기 삭제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군의 특별가중인자로 ‘존속인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범죄에 적용될 수 없는 양형인자로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삭제

기존 양형기준안 (수정안 12쪽)	추가 수정안
○ 존속인 피해자	○ 존속인 피해자

라. 명백한 누락 추가

- 제113차 양형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라는 같은 서술식 기준을 두기로 의결하였으나 양형기준안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8년	6년 - 10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Ⅲ. 벌금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1. 기본 원칙

가. 병과형 기준

(1) 의견 요지: 병과형에의 적용 여부에 관한 명시 필요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형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병과형일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이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은 범죄군별로 ① 벌금형 / 징역형 선택의 기준과 ② 벌금형 권고 형량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삼음
- ①의 경우 병과형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나, ②의 경우에는 병과형일 경우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부패·경제범죄 등 벌금형을 필수적·임의적 병과형으로 정한 경우에도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지는 교통범죄를 필두로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및 적용 경과를 보아가며 앞으로 폭넓은 논의를 거침이 바람직함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논의가 이제 시작된 단계인 점, 병과형에 관하여는 추가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원칙을 설정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음

나. 노역장유치 및 법인처벌 기준

(1) 의견 요지: 노역장유치 및 법인처벌의 기준 언급 필요

노역장유치의 양형기준에 대한 원칙 및 법인 처벌의 양형기준에 대한 원칙도 언급 필요

(2)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 노역장유치 및 법인 처벌에 관하여는 추가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추가적인 원칙을 설정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음

2. 형종 선택 기준

가. 의견 요지: 형종 선택 기준에 관한 추가 설명 필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2에 따르면 형종 선택에 대하여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명자료에도 “향후 각 범죄군별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간략한 서술만이 있을 뿐임. 징역형과 벌금형 중 형종을 선택하는 한계 사례에 있어서 이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함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①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에 따라 형종 선택 인자가 다양할 수 있어 원칙 설정 단계에서 추가로 방식을 정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해칠 여지가 있는 점, ② 징역형과 벌금형은 법정형 간에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보이는 형벌 감수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우리보다 앞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한 영국, 미국 등에서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한계 사안에서 어느 형을 고를지 명시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단계에서는 형종 선택 방식에 관한 포괄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각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검토하면서 만드는 것이 적절함

3. 권고 형량범위

가. 의견 요지 :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을 양형인자에 포함

양형인자 중 행위인자는 범죄행위 자체에 관련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을 이에 포함하기는 어렵겠지만, 행위자/기타인자는 범죄행위가 아닌 피고인 자신에 관련된 요소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위자/기타인자에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상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우리 법체계는 벌금형을 피고인 자력과 관계없이 정액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법정형 안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자력을 포함한다면 위 법체계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의 자력을 벌금액에 반영하는 일수 벌금제는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일부 채택한 제도이기는 하나, 우리와 법체계나 전통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여전히 정액 벌금제를 유지하고 있음
- 추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때 배수벌금형에서의 불법이익 박탈이나 국고에 미친 금전상의 손실 보전 등 벌금형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규범적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4. 집행유예 기준

가. 의견 요지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의 검토시기 특정 필요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벌금형 집행유예는 그 활용이 미미하고, 오랫동안 운용해 온 일본에서도 활용이 저조한 점,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의 검토시기를 특정할 경우 그와 같이 특정된 시점부터는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 집행유

예 기준 정립은 향후 그 운용에 따라 검토 필요

5. 적용 범위

가. 의견 요지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 검토 시 즉결심리절차 보다는 약식절차에 더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필요

나. 논의 결과 ⇨ 양형기준안 유지(의견 일치)

- 약식절차 자체가 절차의 특성상 양형기준 적용하기 부적당한 이상 확대 여부 검토 시 우선순위를 미리 설정할 필요는 없음

IV. 기타

1. 보고 배경

- 당초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2022년 상반기 과업으로 정하였으나, 2022. 1. 24. 제11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의 우선 설정대상을 교통범죄로 정함에 따라 이를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과 함께 2022년도 하반기 과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발생함
- 이에 양형위원회 다른 일정을 참조하여 전문위원단과 운영지원단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일정변경안을 도출하였음

2. 일정변경안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22.4.18.(월)	22.5.2.(월)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 기준) 및 수정안 확정
22.6.10.(금)		양형연구회 8차 심포지엄
22.6.20.(월)	22.7.4.(월)	○ 성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22.7.25.(월)	22.8.12.(금) 또는 22.8.16.(화)	○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22.9.5.(월)	22.9.19.(월)	○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22.10.7.(금) 또는 22.10.11.(화)	22.10.21.(금) 워크숍	o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22.10.31.(월)		양형연구회 9차 심포지엄
22.11.21.(월)	22.12.5.(월)	o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설정안 의결 o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설정안 의결
22.12.26.(월)	23.1.9.(월)	o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설정 및 수정안 의결
23.2.13.(월)		공청회 [대상: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23.3.13(월)	23.3.27.(월)	o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o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o 교통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V. 향후 일정

- 일시 : 2022. 4. 18.(월) 오후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